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2.(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박란희**	☎044-300-7176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행복도시 조명시설 부실, 행복청 · LH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 5·6생활권 조명 설계 미비 확인, 1~4생활권은 설계자료 부족으로 실태 파악 난항-
- 3자 전담 TF 구성, 인수·검수 강화 및 조명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조명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시행자인 행복청과 LH의 책임 있는 개선과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도로조명이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5·6생활권 일부 구간에서는 노면휘도·균제도 등 조명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인수된 1~4생활권은 행복청의 설계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 미이관으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기존 시설의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료 미이관에 따른 증거 부족과 하자보수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의 근본적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며, 행복청과 LH가 원인 규명과 시설 개선, 비용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자체 예산으로 2025년 45개소, 2026년 6월 기준 15개소의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했다며, 책임 규명이 지연되는 동안 재정부담은 세종시가, 안전 위험은 시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행복청·LH·세종시 3자 행복도시 조명환경개선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세종경찰청과 함께 학교·공원·회전교차로 등 취약지역을 야간 합동점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선 대상과 일정,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5·6생활권 도로조명시설의 인수·검수 강화를 주문했다. 차도뿐 아니라 보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의 조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 보완 후 인수해 세종시의 추가 재정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가로등 도입 확대도 제안했다.

셋째, 세종시 조명시설 및 빛공해 총괄부서 지정과 원스톱 민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분산된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 시민 안전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조명시설 문제는 개별 부서의 노력이나 시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행복청·LH의 책임 있는 결단과 세종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